

정책자문위원회 근로복지분과 회의 결과

1. 회의 개요

- 일시 및 장소 : '22.7.22.(금) 14:00~16:40, 공제회 15층 회의실
- 참석 위원 : 8명(김세영, 안홍섭, 김판기, 신영철, 나경연, 곽윤주, 심규범, 민주노총 부위원장<대리참석 송주현>)
- 회의 내용 : ①위원장 선출, ②발제문 발표* 및 논의

* 제1주제 : 퇴직공제제도 중장기 발전 방안 (발제자 : 카톨릭대 김명수 교수)

제2주제 : 건설업 특수고용 노동자의 건강진단 (발제자 : 부산대 김세영 교수)

2. 회의 결과

(1) 근로복지분과 위원장 선출

- 위원장 : 신 영 철 위원 (임기 : '22.7.22.~'25.7.21.)

(2) 발제문 발표 및 논의

제1주제 퇴직공제제도 중장기 발전 방안

논의 내용

- 신영철 위원장 : 공제부금 정률제는 건설사업주의 동의와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향후,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는 검토 의견서 제출, 발제문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안홍섭 위원 :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제도의 여러 가지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
- 나경연 위원 : 근로자 복지는 형평성 측면에서 다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. 정규직에 비해 불이익은 보장하되 초과하는 부분은 반발이 예상됩니다. 추가적으로 퇴직공제부금비가 간접비로 구분되어 있는데 선진국과 같이 직접비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- 김세영 위원 : 공제회 역량은 건설근로자 DB관리에 있습니다. 현재, 건설근로자 산재는 퇴직공제와 일용근로내역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. 따라서 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더라도 공적기관에서 DB관리가 계속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.

논 의 내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송주현 : 근로기준법은 상용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 적용 제외 근로자는 특례로 적용하는 상황입니다. 예를 들어 건설노동자를 근로기준법에 포함시키는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. 이를 통해 건설노동자는 모두 동등해야 합니다. 또 한가지는 퇴직공제 누락입니다. 노동자가 일하고 적립되지 않는 누락이 해결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확대 적용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. ■ 김판기 위원 : 20억원 미만 공사가 전체공사의 95%를 차지합니다. 그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센티브 도입방안을 고민해보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.
------------------	--

제2주제 건설업 특수고용 노동자의 건강진단	
논 의 내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김판기 위원 : 비용은 안전보건기금 또는 안전관리비로 운영하는 것은 어떤지 고민해보아야 할 것입니다. 기관 운영 비용이 더 크다보니 유불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뿐만 아니라 공단과 차별화 전략이 필요합니다. ■ 김명수 : 연간 2천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예산 규모, 자원 마련방안, 운영기관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
3. 행정사항

- (고객복지팀) 근로복지분과 회의 결과 보고 및 전달(조사연구센터)
- (조사연구센터) 근로복지분과 회의 발제 및 회의수당 등 지급

- 붙임 1. 회의자료 각 1부.
2. 참석위원 서명부 1부.
3. 회의록 1부.
4. 회의수당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.
5. 영수증 등 1부. 끝.